

동아시아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어디로 가는가?: 일본의 실험과 도전

강병노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1990년 후반 경제위기와 사회 변화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개념적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유럽과 달리 사회적 경제보다는 소셜 비즈니스(ソーシャル・ビジネス), 커뮤니티 비즈니스(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비영리부문, 제3섹터 등과 같은 유사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시민사회, 민영화, 일자리, 지역사회, 제3섹터 경제, 법제도의 부재, 소규모성,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 미흡 등이다. 일본의 특성은 자생성, 공동체성, 비정형성, “아래로부터의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형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사회적 경제의 시민사회 주도형, 상향식 활동, 공동체 중심형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 활동은 동아시아와 한국에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일본, 동아시아, 공동체, 사회복지

I. 서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 동아시아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신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새로운 도전이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결국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동력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기존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복지에서 접근한 지역사회개발, 지역조직화, 사회행동의 재발견된 모습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복지 차원에서도 서구식 모델의 한계가 노출되어 지역의 공동체 활동, 지역

조직화나 주민참여 등의 활동은 일본의 경험을 차용해 그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유동철·조혜진, 2015; 강병노·유영림, 2015). 동아시아 전반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의 발생은 공통적으로 국가중심적 제도화, 시민사회의 출현, 1990년대 경제위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Defourmy and Kim, 2011).

이런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방향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경제성장과 복지를 함께 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국내의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의 뿌리 이외에 유럽과 일본의 경험에서 차용되어왔다. 특히 일본은 마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험과 성과가 한국에서 부각되었다. 일본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은 1990년대 후반에 지역, 도시, 생활 등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경제 활동의 교류와 협력은 이제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지형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한일 사회적기업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보면 사회적 기업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 더 나아가 서울을 중심으로 2013년, 2014년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런 활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중심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각 지방정부의 성과 및 인적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이런 도시지역의 대규모 활동 외에도 전라북도 완주군의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는 2010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한일 포럼이 개최되어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경제 활동 교류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3).

이런 활동 등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최근 서울 마을활동의 실험은 정석(2014)의 지적처럼 볼로냐 등 유럽 모델의 이식이라기보다는 한국적 토양 위에 일본의 성과와 반성이 결합된 시도다. 또한 전라북도 완주 로컬푸드(Local Food), 부산의 사회적기업, 강원도 원주의 의료생협, 제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

적 경제 활동은 일본이나 유럽의 합성일 수도 있지만 한국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것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라는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다르게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한국과 다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상호교류하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로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유럽형, 미국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본은 이들과 공통점 이외에 차이점도 있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Ishizuka, 2002; Imamura, 2013). 일본을 검토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복잡하지만 고유한 모델 개발, 공동체성, 다양한 조직, 성과와 한계 등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발전 경험이 한국(정부의존성), 대만, 홍콩(시장의존성)과 달리 공동체 중심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준식·안동규, 2014).

기존의 연구 지형을 보면 일본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 유형별 연구나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사례, 국가별 비교가 주요 관심사였다(조상미·김진숙, 2014; Alvar, 2001; Ishizuka, 2002; Imamura, 2009; 네모토, 2014b, 2015). 평가해 보면,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을 주로 국가나 지역 등의 범주에 국한하여 비교하거나 정책과 제도로써 일부분만 고찰하고 한 지역의 사례나 하나의 공동체에 몰입하는 한계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지만 조직적 관점에서 조직 유형, 조직의 사례와 발전 경로, 조직지형 등 조직이라는 시각에 몰입하는 한계를 보였다(이상직 외, 2015). 즉 ‘공동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조직이라는 범주의 한계는 일본 사회적 경제 유형을 구분할 때도 나타난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예비 사회적 경제 유형 등에서는 조직보다는 사업 또는 공동체 활동으로 보고 있다(이상엽·정진섭, 2011; 박혁서, 2015).

또한 일본을 동아시아라는 지형이 아닌 하나의 우수한 사례나 비교사회학적 맥락에서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 나열식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아시아’라는 범주에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동을 동아시아적 의미를 해석하

는 것은 드물었다. 최근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한 지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이상민, 2012; 박준식·안동규, 2014;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 2015).

이런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융합과 협력이라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신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여 한국이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특징

1.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쟁점

사회적 경제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에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Defourny, 2004; Lamberte and Maria, 2009).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Weil, 1996).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자기조정적 시장과 전통적 시장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시장경제의 맹신 및 그것의 부수물인 시장사회와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로 여겨지는 등 대안적 경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Monzon and Chaves, 2012; Laville, 2003). 사회적 경제의 전문 학자인 드푸르니(Jacques Defourny)는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 독립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 등으로 제시했다(Defourny, 2004). 이런 사회적 경제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형태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매우 다양하고 전통적으로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발전되어왔다(Lazerson, 1988).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흐름은 지역사회에서 재생, 사회통합, 공동체의 복원 등 새로운 사

회의 대안으로 발현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로 대변되는 공동체 활동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인재 외, 2013; 강병노·유영림, 2015).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이나 연대 등이 필요하며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단계를 지나는 데 사회적 경제는 이런 공동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성빈, 2007).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 대안적 미래로서 사회적 경제가 동아시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되고 있다. 한때 지역주의 한계와 특정 국가의 영향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공동체의 흐름이 단절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의 실험과 도전은 동아시아에 다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신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이중적 경로에서 정치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각 단위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이후인 것처럼 일본도 오늘날과 같은 시민적 관심을 끌고 다양한 시도가 증폭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다. 지역사회에 밀착한 조직적 활동은 일본의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성이다. 사회적 경제의 지역성은 일본만의 특성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경향이며 일본에서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사업은 핵심 활동이다(이인재 외, 2013). 기존의 전통적 공동체 조직과 비정부 조직들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의 대중화와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특히 일본은 사회적 경제 활동은 지역사회 교류, 주민의 관계 형성, 새로운 자원의 개발 등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경제적 발전의 정체와 사회적 균열은 새로운 경제 활동과 공동체에 대한 바람으로 사회적 경제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등장, 서비스 민영화, 실업과 일자리, 지역사회, 제3섹터 등이 일본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이인재 외, 2013).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시민사회의 등장과 성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1998년에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복지, 마을만들기, 환경, 보육, 지역 재생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둘째, 개호보험의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제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비영리법인, 영리기업, 생협 등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 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가 등장했다(이영환 외, 2009). 셋째, 일본 완전고용의 신화가 몰락하고 노동시장이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급격히 균열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넷째, 일본 사회적 경제의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자”라는 모토는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합력은 취약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사회적사업소 촉진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워커즈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s)나 노동자협동조합도 관련 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를 제3섹터로 정의하는 유럽과 달리 일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사업체를 공공(제1섹터) 및 민간(제2섹터)과는 다른 독자적 섹터로서의 제3섹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연대의 경제라고도 하는데, 주로 워커즈콜렉티브, 지역통화, NPO(비영리 활동조직) 은행 등을 지칭한다. 여섯째, ‘새로운 협동조합’의 신경계적 활동으로 생협, 농협조직 중 소규모의 대안적 조직, 환경·복지·의료생협, 워커즈콜렉티브, 노동자협동조합, 복지·환경보호 등의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NPO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지역경제 재생(산업구조 혁신), 주민협업에 의한 지역사회 형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해법찾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네모토, 2013).

일본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사회, 민영화, 일자리, 지역사회, 제

3섹터 경제 등은 주요 활동영역이자 발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 법제도의 부재, 소규모성, 중앙 정부의 정책의지 미흡 등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두 가지를 공통의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며 향후 일본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특징

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범위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지역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양하지만 그 발생은 19세기 서유럽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에서 출발했다. 그 개념이나 형태도 역사적·사회적 규정과 맞물려 있는데, 드푸르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조직 형태와 범위로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결사체(associations), 재단(foundations) 등이 있다(Defourny, 2004). 개념 정의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규범적인 수준에서의 정의와 가치인데 관변 단체나 협동조합 등을 규범적 측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신명호, 2009).

일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회조직 중 조직의 목적 내지 운영원리에서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이 모두 또는 일부 결합된 혼종성을 가진 조직으로 인식된다(이상직 외, 2015).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그 개념의 모호성과 차별성이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스웨덴 등 유럽에서와 달리 제3섹터 개념의 차별성으로 인해 개념 정의, 논의, 명확한 제도나 조직의 범위 등의 규정이 모호한 특징이 있다(Alvar, 2001). 일본에서는 한국 또는 유럽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社会的經濟 혹은 ソーシャル・エコノミー)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지 않으며, 소셜 비즈니스(ソーシャル・ビジネス), 커뮤니티 비즈니스(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비영리섹터, 제3섹터 등과 같은 유사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다만 그 표현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이 NPO 법인이다. 일본에서는 NPO 법인과 공익법인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지만 그 범위는 영리/비영리, 공익/사익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유형의 조직이 제도적·정책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조율하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이상직 외, 2015).

2) 사회적 경제의 원칙과 특징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성, 공공성, 분배, 사회성, 연대 등의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운영 원칙이나 방향이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 크게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 ② 독립적 운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④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을 그 운영 원칙으로 한다(Defourny, 2004).

구체적으로 보면 자발적 결사체의 원칙에 의거해 회원들의 출자나 회비를 기반으로 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회원 및 회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협동조합이나 결사체, 재단 등은 회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에 시장경제와 차이가 있다. 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지만 자율성을 지향한다. 독립성은 의사결정에서도 민주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분배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수익금의 적립,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사용, 구성원에 대한 잉여 배당 등을 하게 된다(이인재 외, 2013).

사회적 경제의 운영은 결사, 공공의 이익, 민주적 운영 그리고 분배적 경제 활동을 추구하므로 기존 경제의 대안적인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 대한 대안적 경제를 내포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많은 경우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지역 문제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여성 노동력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돌봄서비스 등 여성집중적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이인재 외, 2013).

일본의 특성은 자생성, 공동체성, 비정형성(전형적인 조직, 제도, 법 등이 모호하거나 없음), “아래로부터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

첫째, 독립적인 제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법이 없는 현실에서 일본 사회적 경제의 주요 참여자는 NPO 법인과 공익법인이다. 일본에서는 형식화된 조직 형태가 있는 한국과 다르게 사업 등이 연결되면서 형성된 공동체 조직의 특성을 가진다(이상직 외, 2015). 둘째, 일본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비영리 부문 및 협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보장과 의료보호에서 사회적 경제가 공공 부문을 대신하는 대안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로 부각되었다(Ishizuka, 2002). 다만 이런 발동 기제는 일본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셋째, 조직, 사업, 공동체 등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유형의 중첩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과 NPO,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만들기 등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용어, 개념, 사업, 범위 등이 혼재되어 있고 발전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협력성, 연대성, 시민사회 등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에 상향식으로 요구하는 경제사업 및 지역사회 시민운동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III. 연구설계

1. 연구방법

하나의 국가, 지역, 문화, 민족 등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시적 차원에서의 비교사회학적 접근이나 미시적 관점에서 사례연구가 있다 (Singleton et al., 1999; Rubin and Babbie, 2001). 일본 사회적 경제 관련 기존 연구방법의 동향을 보면 첫째, 비교사회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사회적 경제의 제도, 조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일본과 다른 국가를 비교, 동아시아 차원에서 관련 국가별 비교 등 거시적 분석을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2015)은 한·중·일의 사회적 경제를 조직 형태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동태적 현황을 비교했다.

둘째, 미시적인 사례연구에서는 일본의 현황에 대해 하나의 활동, 제도, 조직

등을 검토하거나 주요 조직을 포괄하여 탐구했다. 일본의 사회적 경제조직 전반을 다룬 이상직 외(2015)의 연구, 일본인의 관점에서 일본의 현황을 설명한 네모토(2011, 2013, 2014b)의 접근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미시적 시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일본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특성과 동아시아적 의미를 탐색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에서 연구방법상의 차이는 분석대상과 연구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분석범주로서 연구대상으로 일본에서는 사회적 경제용어 자체나 그 유형이 모호하다는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일본의 사회적 경제 유형을 정의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개념의 특정 측면이나 규범과 직접 관련 있는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광의의 개념으로 다양한 유형이 사회적 경제의 특성과 관련성을 평가해서 구별하는 방법이다(이상직 외, 2015).

기존 연구를 보면 이인재 외(2013)의 연구에서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콜렉티브, 커뮤니티 비즈니스, NPO가 포함되었지만 마을만들기는 제외되어 있다. 둘째, 세 가지 관점(다양성, 혼종성, 동태성)에서 김의영 외(2015)는 사회적 경제를 조직 차원에서 조망하면서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사회조직 I, 기타 사회조직 II로 구분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포괄적 관점에서 이상직 외(2015)는 기존의 네 가지 조직 유형 이외에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비영리부문, 제3섹터, 시민사회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는 앞선 연구를 토대로 다양성, 포괄성, 규범성, 사회적 경제의 가치(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이인재 외(2013)가 제시했던 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콜렉티브, 커뮤니티 비즈니스, NPO, 사회적 기업 이외에 소셜 비즈니스, 마을, 그리고 예비 사회적 경제를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 관점과 함의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보여주는 일본의 현황 파악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이외에 동아시아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추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동아시아적 함의가 모호한 이상민(2012)

표 1 분석대상(사회적 경제 공동체 유형)

| 기준 | 유형 | | 참고자료 |
|---------------|--|---|--|
| 규범적 관점 | 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콜렉티브, 커뮤니티 비즈니스, NPO | | 이인재 외 (2013) |
| 세 가지 관점 |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사회조직 I, 기타 사회조직 II | | 김의영 외 (2015) |
| 포괄적 관점 | 공동체 활동 (사업) |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비영리부문, 제3섹터, 시민사회 등 | |
| | 조직 |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 인증, 인정 NPO 법인, 공익사단, 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 동조합 |
| | |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복지법인, 사회의료법인, 각종 협동조합, 제3섹터 기 관, TMO,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주식회사, 합동회사 |
| | | 기타 사회조직 I | 의료법인, 학교법인, 갱생보호법인, 노동조합, 각종 공제 조합, 인가 지연단체 |
| 기타 사회조직 II | 일반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지역단체, 특수법인, 특별민간법인, 특정독립행정법인, 일반독립행정법인, 지 방독립행정법인 | | |

의 한계를 극복하고 드푸르니와 김신양(Defourny and Kim, 2011), 박준식·안동규(2014), 김의영 외(2015)가 제안한 동아시아에서 사회적 경제의 방향과 한국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¹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틀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 연구에서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 동아시아라는 범위에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를 고찰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 공동체 형태나 조직 유형학적 접

¹ 일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앞선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 공식적 제도화(법, 정책, 기구, 조직 등)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 자체의 연구가 드물다는 것이다. 결국 일단의 관련된 주체들을 모아서 그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판단하여 고찰하는 임의적·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본의 동향을 파악할 때 사회적 경제 관련 주체의 변화를 잘 관찰하여 개념, 범주, 방향 등에 대한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근, 하나의 사례에 대한 심층 이해적 접근 등을 한 것을 알 수 있다.²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연구한 알바(Alvar, 2001)는 일본과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개념 발생 배경, 조직 유형, 개념에 대한 연구, 주요 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드푸르니와 김신양(Defourny and Kim, 2011)은 동아시아의 사회적 기업을 비교 분석하면서, 역사적 배경, 각국의 특징, 활동내용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별 특징을 정립하여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유형화나 모델화를 시도했다. 분석국가로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이 포함되었다. 박준식·안동규(2014)는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과 홍콩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로를 비교하면서 주체 형성, 발전 맥락, 발전 경로를 분석틀로 제시했다.

둘째, 공동체 형태나 조직 유형화적 접근으로서 이상엽·정건섭(2011)은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분석하면서 분석틀로 동기와 인식 수준, 지원체계, 중간지원조직, 리더와 주민 참여,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했다. 조상미·김진숙(2014)은 기존 연구가 유럽과 서양 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을 비판하면서 한국, 일본, 홍콩의 사회적 기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지원체계(법률, 정책,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지원방법(재정, 경영, 기타)을 분석틀로 상정했다. 연구범위를 동아시아 주요 국가로 확대해서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2015)은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교할 때 그 기준으로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을 분석내용으로 하여 동태적 발전 상황을 분석했다. 이상직 외(2015)는 김의영 외(2015)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생 배경, 개념, 현황, 조직목표, 유형, 발전 과정, 특성 등을 설명했다.

셋째, 하나의 사례에 대한 심층 이해적 접근으로서 네모토(2011, 2013, 2014a, 2015)의 연구가 독특하다. 이 연구들에서는 일본 사회적 기업의 사례,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례, 그 역할과 과제, 로컬푸드, 재난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

²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부문의 연구가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국가별 유형 비교나 사례 연구, 기존 문헌 검토 등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이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과 비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본 연구 또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동아시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의 구축과 연구방법의 발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 형태나 조직 유형화적 접근의 하나로 일본 사회적 경제의 특성, 역사적 발전 과정의 맥락, 분석의 간결성, 자료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분석틀로 출발과 배경, 개념과 현황, 사업 내용과 특징, 전망과 과제라는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분석했다.

IV. 일본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동과 전망

1.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현실과 유형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한 접근은 조직 형태, 사업, 재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조직 형태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등이 사회적 경제로 규정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어떤 차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이며 1898년에 구매조합 혹은 소비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생활협동조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이 조직되어왔으나 군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협동조합의 복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1956년 일본협동조합연락협의회(Japan Joint Committee of Co-operative, JJC)가 설립되어 협동조합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가 그 역사는 길지만 법, 제도,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유형과 종류가 혼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처럼 사회적 경제를 명시하는 제도나 법이 일본에는 없다(이상직 외, 2015).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조직에 따라 개별적인 법제도의 관리와 규제 제도를 만들어 이를 통해 해당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비정부 조직이나 시민사회 단체 중 하나로 인식되며 조직 전반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는 부재하다(박준식·안동규, 2014). 비

록 일본의 경우 사회적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과 법이 없다고 해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소셜서비스의 경우 2009년 민주당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나 민간주도를 강조하는 ‘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3년 보수정권의 교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공공정책 대신 ‘공조사회 만들기(共助社会づくり)’ 정책의 경우 NPO 법인, 공익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추진하는 소셜 비즈니스가 중시되었다(이상직 외, 2015; 内閣府, 2017a).

제도적으로 아직 협동조합에 관한 통일적인 법제도가 없으며, 각 행정부처의 기준에 근거하여 생협법, 농협법 등 개별 협동조합법 등의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다. 노동자협동조합과 워커즈콜렉티브는 각각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도 관련 법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 하고 있지만 무엇을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할지도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직, 사업, 지역성, 시민사회, 경제활동 등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서로 중복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워커즈콜렉티브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에도 NPO 특성이 포함된다.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이들은 ‘시민참여’, ‘경제활동’,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며 정부, 기업에서 작동하는 고용노동,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 내 노동과 비교할 때 그 중간에 위치한 노동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방식인 ‘시민노동’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인재 외, 2013). 따라서 일본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며 향후 일본 특유의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발전 전망도 다르게 제안될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동 사례별 특성과 발전방향

1) 생활협동조합

일본에서 협동조합의 시작은 소비자협동조합부터이며 대표적인 조직은 생활협동조합이다. 그 이유는 활동이 소비뿐만 아니라 생활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

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앙조직이 분산되어 민주적이고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이상직 외, 2015).

출발은 1879년에 설립된 동경공립상사(東京共立商社)이며 이후 20세기 초까지 구매조합 혹은 소비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생활협동조합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군국주의로 인해 부진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상황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민생협 중심 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협동조합들은 공동구매 사업만이 아니라 물가인상 반대 운동 등 소비자운동을 적극 진행했을 뿐 아니라 노동금고의 설립을 시도해 공제조합으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운동으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발전 과정과 현황을 보면 1955~1975년에 조합원 수 5.8배, 출자금 65.3배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생협의 조직률은 1980년 8%에서 1990년에는 22%까지 성장했다. 2009년 기준 조합원 약 2,576만 명, 출자금 7,114억 엔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 1,082개에서 2000년 860개, 2013년 577개로 감소했으나 조합원 수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다(이인재 외, 2013; 이상직 외, 2015).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의 특징은 조직 설립의 자율성, 조직 운영의 민주성이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조되면서 지역주민 운동과 결합했다. 또한 일상생활 차원에서 개호보험, 보육사업까지 확장되면서 위커즈컬렉티브, 복지생협, 환경생협 등을 조직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이인재 외, 2013; 이상직 외, 2015).

2)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은 일본의 실업자 노동운동조직인 전국일본자유노동자조합(이하 '전일자노')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함께 일본은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일자노는 40여만 명의 조직원이 활동하여 실업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한 활동을 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중고년 취로사업'을 실시했고 이는 일시적인 취로와 생계보호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이후 실업자들이 줄어들게 되자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사업이 축소되었다. 이에 전일자노는 '지역의 주민에게

유용한 실업대책'으로의 전환과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단에 지자체가 일을 주고 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업단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 전일자노의 이런 문제 제기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전신인 사업단 운동이 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86년에 전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게 된다(김정원, 2003).

사업은 센터사업단(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직할사업단), 중고령사업단, 고령자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활동가는 주로 50~60대의 중고령자들이며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복지법인을 조직하여 보육협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부모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강내영, 2011). 노동자협동조합은 비즈니스로서 병원 청소와 설비관리, 건물종합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적으로 성장하여 협동조합 간의 제휴 사업, 공원관리를 비롯한 각종 재활용사업, 급식 서비스 및 배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호사업 등 홈헬퍼(Home Helper) 양성소를 설치하고 정부가 규정한 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교육한 후 강좌수강생을 중심으로 워커즈콜렉티브 방식의 지역복지사업소를 만들기도 했다(이인재 외, 2013).

3) 워커즈콜렉티브

먼저 발생과 배경을 보면 최초의 워커즈콜렉티브는 1982년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탄생했다. 1982년 '생활클럽 가나가와'가 '데포(depot: 프랑스어로 화물의 설치 장소, 창고, 배송 장소를 의미)'라는 일종의 거점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비교적 주택 밀도가 높은 지역과 자신의 집과 가까운 지역에 부역의 연장으로 공동 소비재를 저장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생활클럽 가나가와'는 시설관리의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업무위탁과 도시락 사업을 담당할 사업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사업조직은 자주관리, 자주운영의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 참가 형태로 운영하고자 했으며, 주부들의 사정에 따라 일하는 방식은 유연하게 하며, 새로운 노동 형태와 삶의 방식을 구현하려 했다(이인재 외, 2013).

개념적으로 워커즈콜렉티브는 일하는 사람들이 경영자이자 노동자로서 출자·노동·조직운영을 담당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다. 즉 고

용당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협동하여 일하며 사업하는 단체인 셈이다. 사업 형태에서는 다양한 업종에 참여하여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행정당국이 워커즈콜렉티브와 복지사업을 계약해서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이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동은 일자리 제공, 지역운동, 여성운동, 재생산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단순히 일자리 이외에 가치와 원칙이 있는 지역운동의 성격도 있다.

주요 원칙과 특성을 보면 공유가치 형성(인간적·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일하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공유), 공정한 노동소득 및 사회보장 실현, 민주주의와 이익배분(민주주의에 기초해 조직운영을 하며, 참가자가 사업자금을 출자하되, 잉여를 개인에게 미배당), 여성운동(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왔던 가사노동—육아노동, 간호노동, 가사노동—이 ‘생명의 재생산 노동’이라는 가치 존중), 지역사회운동(지역에서 생협, 복지시설, 지방행정부, 기업 및 각종 공익재단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정체성, 자립, 자생력, 문화, 환경을 복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활동) 등이 포함된다(이인재 외, 2013).

워커즈콜렉티브가 일자리와 경제 두 가지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과 과제로 제안된 것은 노동자이고 경영자라는 의식의 차이 개선, 상호능력 평가, 민주주의 과정에 따른 시간 소요, 남성이나 청년층의 참여 미흡,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제3피보험자의 연금제도 불충분 등이다(강내영, 2011).

4) 커뮤니티 비즈니스

원래 영국에서 출발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동에서 앞서 다른 활동과 다르게 조직보다는 사업이며, 여성, 고령자 등 대상중심이기 보다는 주민 전체 중심이고, 한 분야에서 전체 분야로의 확장 등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발생 기원을 보면 일본에서는 일종의 일본식 영어로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이상직 외, 2015). 주로 비즈니스적 방법을 도입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협력적인 관계 및 활동을 통해 붕괴하고 있는 지역사회(communitiy)를 재생시키고

자 하는 지역의 다양한 작은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호소우치 노부타카에 따르면,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시각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 중심의 지역사업을 지칭한다.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안의 문제 해결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인재 외, 2013).

주요 활동은 복지, 건강, 의료, 장애인 지원, 노숙인 지원, 지역 활성화, 마을 만들기, 관광, 안전, 안심, 예능, 스포츠, 국제교류 등 매우 다양하다. 경제산업성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사업자 수는 약 8,000개 소이며 고용규모는 32만 명, 시장규모는 약 2,400억 엔, 사업 형태는 NPO가 약 50%, 주식회사가 2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내영,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행정(공익성), 기업(수익성), 시민사회(연대성)가 교차하는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을 경영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며 수익을 확대한다(이상엽·정건섭,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사회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그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이중적이다.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다른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동과 연관이 깊은 특징이 있다. 첫째, 소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중첩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 차원에서 전자는 국내외로 활동 영역이 넓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국내로 제한적이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체들은 주민참여의 통로이자 사업추진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방식으로, 사회회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으로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넓게는 마을만들기를 포괄하게 되었다(이상석 외, 2015).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 행정에 의해 사업의 축소, 저렴한 업무위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한계도 있다(이상엽·정건섭, 2011). 향후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 활동의 중추적 위치를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표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

| 구분 | 특성 |
|-------|--|
| 활동 범위 | 지역(생활권 중심) |
| 목적 | 주민 주도, 관민 협동에 의한 지역과제의 해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내용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대개 공공서비스와 대체 및 보완관계에 있으며, 영리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이 다수 |
| 주체 | 지역주민 또는 지역조직,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
| 운영 | 경영수지 면에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수입이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 가능 |
|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에 의한 문제 해결, 고용창출, 공공 부문과 영리기업에 의해서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니즈 충족, 공동체성 회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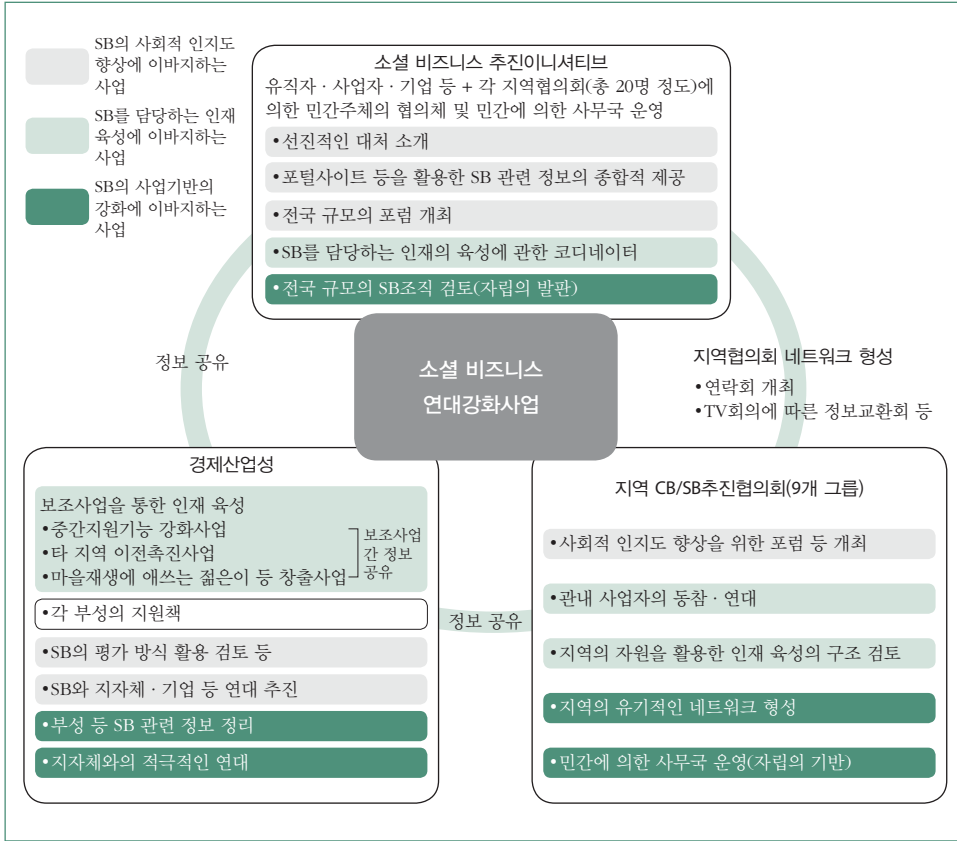
출처: 김혜민(2011).

5) 소셜 비즈니스

개념적으로 소셜 비즈니스는 오늘날 일본에서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학자들이 정의한 소셜 비즈니스 개념을 보면 “사업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이상직 외, 2015). 구체적으로 소셜 비즈니스는 사회성(사회적 사명), ② 사업성(지속적 활동), ③ 혁신성(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체제, 가치의 생산) 등의 요소를 가진 사업체를 의미한다(이인재 외, 2013).

발전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 소셜 비즈니스가 부상한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이며 2008년에는 소셜 비즈니스 예산으로 총 5억 7천 엔을 투입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민관협동 조직인 ‘CB/SB 추진협의체(CB/SB推進協議会)’와 중앙정부 수준의 협의체인 ‘소셜 비즈니스 추진 이니셔티브(ソーシャルビジネス推進イニシアティブ)’가 결성되었다(이상직 외, 2015).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소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 워킹그룹,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용자제도, 인재육성정책, 소셜 비즈니스 연대모임 활성화 등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2008~2011년까지 집중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은 소셜 비즈니스 지원정책 중에서 연대사업 부문을 제시한 것이다. 제도화를 위해 정부(경제산업성), 민관협력(지역협의회), 주체(유직자, 사업자, 기업 등 협의회) 등이 네트워크



출처: 經濟産業省(2010), 김혜민(2011)에서 재인용.

그림 1 일본 소셜 비즈니스 지원 정책(연대사업 부문)

를 형성하여 인식 개선, 인재 육성, 정보 공유,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김혜민, 2011).

특징적인 것은 소셜 비즈니스는 일본에서 사회적 경제를 일컫는 개념으로 발전해왔으나 별도의 조직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했고 일반기업이나 공익법인, 협동조합과 같이 기존의 조직이나 NPO 법인과 같이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조직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용어 자체가 특정한 조직 유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업이나 활동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직 외, 2015).

6) NPO(비영리 부문과 제3섹터)

NPO는 1995년 고베 대지진 후 1998년 12월에 NPO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NPO법은 그때까지 행정에 의해 독점되었던 공익 개념을 시민 사회에 개방하고, 시민활동단체에 간단히 취득할 수 있는 법인격이 생겼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지만 출자 규정의 결여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나 설비투자를 할 때에 출자라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NPO법이 시행된 이래 NPO는 증가했으며 일본에서 NPO는 2003년 2월에 1만 89개로 1만 개를 넘어서고 이후 매년 5,000개씩 증가했으며, 최근에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증가 추세다. 2011년 기준 일본 내각부가 인증하는 도도부현에서 활동하는 NPO는 3,521개이며, 도도부현이 인증하는 NPO는 3만 7,118개로 모두 4만 3,920개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쿄도가 6,819개로 가장 많다(坪郷 實, 2011, 이인재 외, 2013에서 재인용). 2015년 기준 5만 147개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 처음 등장한 인정(認定) NPO는 2015년 기준 718개로 성장했다. PST(Public Support Test, 공익인증검증)를 거쳐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기여도를 검증 받은 NPO 법인은 인정 NPO 법인으로 승격되어 세제 혜택 등 좀 더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받는 유형이다(内閣府 2017a, 이상직 외, 2015에서 재인용).

주요 특징으로는 지역에 있어 시민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시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제도를 제안하고 NPO 활동의 기반 정비를 위한 제언을 한다. 둘째, NPO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지원, 활동 지원, 운영 지원 등의 NPO 지원 활동을 한다. 이런 성장과 더불어 문제도 존재하는데 재정적 과제,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시민성, 자율성 침해, 정부와의 관계에서 사업의 위탁으로 지속가능성의 불안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이인재 외, 2013).

NPO가 제3섹터는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NPO가 제3섹터지만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용되면서 국가, 지방 공공단체(제1섹터)와 민간기업(제2섹터)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사단 및 재단법인 혹은 사업체를 의미한다. 비영리부문의 기준은 비영리성이며 그중에서도 NPO 법인이나 공익법인 등이 비영

리부분에 가장 가까운 조직이다. 최근 영리-비영리의 혼합 조직이 확장되고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국가, 시장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비영리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이상직 외, 2015).

7) 사회적 기업

일본에서는 1995년에 발생했던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大地震)’ 이후,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점 노출, 사회적 위기 대응의 취약성 등에 대한 반성으로 ‘주민 스스로 이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정재욱, 2010). 일본은 사회적 기업이 미국 형과 유럽형의 혼합 형태로 도입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착되었다(김용민 외, 2012).

일본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인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NPO 법인으로 알려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협동조합, 유한책임회사, 임의단체, 재단 및 사단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NPO 법인으로 ‘특정비영리활동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란 특정비영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각호(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조상미·김진숙, 2014).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의 통상 산업부처럼 경제산업성, 내각부, 관동경제산업국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김학실, 2011).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개의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나 자원 등을 소개해주거나 중개해주고, 인재 육성이나 개별맞춤상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과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조상미·김진숙, 2014).

사업 유형이나 조직을 보면 크게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으로 구분된다. 먼저 비영리조직 형태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업형 NPO’다. 영리조직은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지향형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 형태, NPO 형태, 회사에 NPO가 들어 있는 형태, 그리고 NPO에 회사가 들어 있는 형태 등이다. 사회적 기업의 기본 요건으로는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을 들고 있다(정재욱, 2010).

최근 들어 일본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소셜 이노베이션 클러스터(Social Innovation Cluster, SI 클러스터), 즉 사회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물리적 공간 혹은 집합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기업을 통한 관련 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산과 유통, 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조상미·김진숙, 2014).³

사업 유형이나 내용을 보면 정부의존형인 한국과 다르게 정부 의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로 정부가 사전에 기획한 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사업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획을 기반으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자체의 회비나 기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들은 주로 자립적·상향적 성장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성장방식이 다양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 영역 역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법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및 관련 활동을 지원·규율하는 내용은 다양한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도 NPO나 회사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영·미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및 활동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조직체를 형성하여 이에 대응해왔다(정재욱, 2010).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한국보다 미비하나, 중간지원조직과 지역사회를 기

³ 일본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분화되어 발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협동조합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반으로 하는 관련 조직 네트워크와의 유기적 협력 수준이 매우 높아 사회적 기업 활동을 주로 하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심체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NPO들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계속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와 고용 및 실업 문제,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O들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조상미·김진숙, 2014).

성과 이외에 한계도 있다. 일본은 기존의 전통적 공동체 조직과 비정부 조직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기존의 사회 조직과 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기존의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힘이 강력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Imamura, 2013). 일본 정부는 원래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 제공의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아웃소싱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 또한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 억제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는 상충관계가 성립되어 양립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김용민 외, 2012). 지역 차원에서는 그 사회 속에 공동체와 시민사회 조직들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공동체 조직과 신뢰의 구조는 사회적 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8) 지역경제 공동체로서 마을(마츠즈쿠리)

일본에서 마을만들기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며 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인 중앙의 정책으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 주민운동에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행정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형태로 일본 전역에 확산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더

욱 다양한 체제로 발전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조직 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신필균, 2008). 중앙의 경우 일본 정부는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복지 인프라 정비의 측면에서 실시되는 마을만들기는 그 입안, 계획, 실행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주력하여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김은숙, 2004).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과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과 성찰로서 선거를 통해 등장한 혁신지자체의 주도로 활성화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이 일본 전역에 확산되었다. 현재는 주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그 자체로서 표현되고 있다(성남문화재단, 2009). 마을만들기는 일본 말로는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라고 하는데, ‘마치’는 일반적으로 ‘가(길, 街)’를 표현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리적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행정단위를 뜻하는 ‘정(町)’과 함께 ‘마치즈쿠리(町づくり)’라고 사용함으로써 행정적인 의미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라고만 사용되는데, 이 말에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사람들의 생활까지 포함하고,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의 마을만들기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담으려 한다(김인호, 2006).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은 주민 참여 촉진, 민관협력, 지역자원 유효 활용, 지역인재 확보와 육성 등이다(이상현 외, 2012). 첫째, 주민의 참여 촉진은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지역정체성을 찾기 위해 도심거주기능 재생과 함께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지역만들기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계기를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기존 공공 및 민간 펀드와의 제휴를 통해 주민의 마을 활동에 재정을 지원했다. 이 펀드를 토대로 마을 허브기관인 마치즈쿠리센터에서 마을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주민그룹의 활동을 지원했다. 점차 마을 활동이 확대되면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동 및 연대에 의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 기업과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포함한 광범한 파트너십을 가진 산·학·관 연대에 의해 지역에 걸친 새로운 산업과 신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공동체로서 일본 마을만들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적 자금 조성 및 지원. 주민협의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마치즈쿠리 펀드' 운영
- ② 전문적 조언, 연구개발, 정보관리, 컨설팅 등의 중간지원기관 구축
- ③ 전통적인 마을 경관의 복원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결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민관 거버넌스의 합리적 운영
- ④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주도형 마을만들기를 하는 영리 민간기업의 마을사업
- 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목표를 통해 수익 창출과 비용 감소의 경제 효율의 원리를 활용한 사업체계 구상

종합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일본의 경험은 마을만들기 지원, 주민의 주체적인 활동, 전략과 방향, 지역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정보센터, 마을만들기 펀드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신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한다. 점차 행정중심의 하드웨어 방식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도 마을만들기가 공간적·환경적 관심 이외에 주제와 의미, 사람과 주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강병노, 2010).

9) 예비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일본에서 예비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국가나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에 편입 또는 그 특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의료법인,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일본 상권활성화 관리조직), 제3섹터, 기업 등이 있다(이상직 외, 2015).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최근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유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지원하에 정부 규제의 대상이면서 지원의 대상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부과되는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 자산요건 규정, 자금용도 제한 등의 규칙은 평가표에 제시된 경제성 부문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 유형과 차이가 있다. 특히 이용자 입소가 이루어지는 1종 사회복지사업은 NPO 법인이나 일반 공익법인이 할 수 없는 분야로, 사업 수행 권한을 가진 사회복지법

인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영역이다.

둘째, 사회의료법인은 의료법인 중 공익성이 높으며 200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4년 기준 215개가 있다. 사회의료법인과 의료법인의 차이는 의료법인은 병원 경영 외에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 규제를 받는 반면, 사회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좀 더 폭넓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영리성과 수익성에 대한 사업 범위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활동의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셋째, TMO는 일본은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하고자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TMO는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공동 관할 체제를 구성하여 일체적으로 지원을 추진하며 상공회, 상공회의소, 전문가, 지역주민, NPO 등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1998년 제도 도입 후 전국 3,100여 개의 지자체 중 중심시가지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631개의 지자체가 TMO 기본계획을 제출했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상공회(75개), 상공회의소(186개), 특정회사(113개), 재단법인(2개) 등 총 376개가 TMO 사업 추진 주체로 인정되어 활성화 기능 수행 및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정법선, 2015; 박혁서, 2015). 처음과 다르게 TMO의 사업효과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NPO 및 기타 비영리법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제3섹터 기관은 1980년대 이후 ‘민간 활력의 도입’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설립한 민간법인으로, 조례에 의해 특별권한을 가진다. 주요 유형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례민법법인 등이다. 규모는 2013년 현재 7,000개에 이른다. 제3섹터 기관은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적 편익이 넓은 지역에 적용되는 사업, 사업 수입이 일정수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민간자본 중심이지만 지자체가 자본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과 그 관련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지방자치정부, 영리기업의 협력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Imamura, 2009). 따라서 기업도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유형이자 공동체로 포함될 수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사

회적 경제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기업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마을 만들기 기업 및 다양한 소셜 비즈니스 조직이 합동회사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3.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비교와 시사점

1) 일본과 한국의 비교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면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델과 모형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체에 따라서 국가주도형 발전, 기업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으로 구분하는데 일본은 시민사회 주도형이라고 분석된다(정재욱, 2010). 일본에서 공동체적 협력 조직들은 강력한 시민조직 운동의 하나로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이 ‘하향식’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에 성공했다면 일본의 사회적 기업들은 ‘상향식’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속한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⁴ 이런 배경의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경제가 태동한 유럽 대륙 국가들보다는 일본이 영국(커뮤니티 비즈니스)과 미국(소셜 비즈니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이상적 외, 2015).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독특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한국은 선별적 제도, 일본은 보편적 지원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 NPO 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적 제한(자금, 고용률 규정) 등이 없는 개방적인 특성이 있다. 일본의 보편성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시민사회, 공동체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사회가 시민사회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⁴ 일본에서 NPO 법인체와 마을만들기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과 가이드가 일본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으므로 과연 일본을 상향식 발전 모델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본의 상향식 모델은 명확하게 사회적 경제정책, 담당부서, 법과 제도 등이 형성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중앙정부의 종합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역량 강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새로운 공공성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활동 등의 특성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동 비교

| 분석틀 | 기준 | 일본 | 한국 |
|-----------|-------------|---|--|
| 출발과 배경 | 발전 경로 | 상향식 | 하향식 |
| | 배경 | 자생적 배경 + 미국, 영국의 영향 | 자생적 배경 + 유럽, 일본의 영향 |
| 개념과 현황 | 개념과 모델 | 시민사회형 공동체형 | 정부의존형 국가주도형 |
| | 법 | 사회적 경제 관련 법 없음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5) '신 기부세제', 세제개정법(2011)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2016) 협동조합기본법(2012) |
| | 정책방향 | 보편성(일반성)(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선별성(사회적 기업) |
| | 정책 전달 기구 | 사회적 기업 중앙 전담부서 없음 관계부처 협력 (경제통산산업부, 내각부 등) | 중앙: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방: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 | 규모 | (2011년 3,000엔 이상 규모: 약 15%) •NPO: 10,089개/2003년, 40,000/ 2011년, 50,147개/2015년 •인정 NPO 법인(11. 30. 현재): 51,356건 | •사회적 기업: 555개/2011년, 1,068개/2014년, 1,173개/2016년 •마을기업: 1,342개/2016년 •협동조합: 10,719개/2016년 |
| 사업 내용과 특징 | 유형 (조직), 주체 | •NPO 법인, 공익법인, 생활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 •제3섹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 •사회적 기업, 민간법인, 협동조합,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예비 사회적 경제 공동체 등 •인증 받은 조직(명칭 독점) |
| | 중간지원 조직 | NPO 센터 | •중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수도권, 대도시) |
| 전망과 과제 | 발전전략 | •시간이 걸리는 자율성과 민주성 유지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삶 방식 •인식 개선과 청년의 참여 •민관협력과 경쟁력 확보 •사회적 기업과 기존 지역조직의 협력과 신뢰 형성 •정부 재정 감소와 활동 저하 | •성장과 진화의 단계에 혁신 •자생적 생존 역량 •공동체성의 가치와 의미 복원 •민간과 정부의 협력 •생태계 조성 and 인프라 구축 |

출처: Alvar(2001); 이인재 외(2013); 조상미 · 김진숙(2014); 박준식 · 안동규(2014); 네모토(2011, 2013, 2014a, 2014b); 이상직 외(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6); 행정자치부(2016); Imamura(2013); 内閣府(2017b).

(네모토, 2011).

둘째, 정책과 법에서 보면 한국은 소위 전담부서, 법률적 제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제도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관련 법률이 NPO법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이 사회적 경제를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제도를 일본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정재욱, 2010).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나 육성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실업이나 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시민사회, 빈곤, 경제, 일자리, 생활, 지역, 협동조합 등 매우 광범위하다. 반면에 한국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었다(박준식·안동규, 2014).

셋째, 정책과 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본은 한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증이나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내에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며, 조직의 성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다루는 행정기관 간의 종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한국처럼 지방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의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 단체의 기능이 한국이나 대만 등과 비교할 때 결코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례로 TMO를 전신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나 제3섹터 기관과 같이 정부가 일정 부분 운영에 개입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은 최근 일본의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박혁서, 2015).⁵

⁵ 일본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방식이 확대된 이유는 역사, 유형, 활동마다 달라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지만 반성과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의 사회적 위기로 정부정책, 공공성, 공동체의 붕괴 등에 대한 성찰은 지역사회 재생, 시민사회운동의 확장, 경제와 사회적 활동의 조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역량 강화 등 신경제활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발생을 가져온 한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일례로 로컬푸드 운동의 경우 일본과 한국은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로컬푸드 운동의 인증제도, 기념일, 식생활 교육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초기 단계다.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지역과제를 가시화하면서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서 신 공공영역과 민간 네트워크 형성이다(네모토, 2014b). 이런 현상을 보면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와 민관협력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관 중심의 행정, 민 자체의 경제와 사회적 활동은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신사회적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로로 나아가는 것이다(네모토, 2014a).

넷째, 조직이나 활동 주체에서 보면 알려진 바와 같이 NPO 법인과 공익법인이 일본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영리/비영리, 공익/사익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다양한 조직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신생 조직이라기보다는 정책 변화나 조직 내부의 요구에 따라 활동의 목표나 성격을 바꾼 조직들이다. 기존에 비영리조직으로 인식되었던 조직들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반대로 영리조직으로 인식되었던 조직들이 비영리재단 설립이나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국가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영역에서 여러 민간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정부가 반민반관 형태로 설립 및 운영하는 조직 또한 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조직의 활동이 제도적·정책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율되는 형태로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이 영역은 여전히 형성 중이다(이상직 외, 2015).

2) 동아시아 사회적 경제 공동체로의 확장

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발전의 맥락과 성격이 유사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인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와 발전 방식은 상당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

회적 경제가 일찍부터 뿌리 내린 유럽과 비교할 때 이들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은 주어진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조직화 방식과 맥락 속에서 그들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여기에서 일본 사회적 경제의 특징은 역사성, 지역성, 민주성,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보완, 공동체, 사회문제에 대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관점은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 한국에서 1990년대 초 등장한 담론으로서 경제공동체, 정치안보적 공동체, 대안사회로서의 공동체 등의 방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대안체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찬성론과 서구 경험을 통한 허구적 공동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박승우, 2011; 이남주, 2005). 다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 국가와 글로벌 경제의 의한 대안경제 및 사회공동체의 필요성은 항상 대두되어왔다. 그 기저에는 서구중심의 근대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토착적인 대안, 즉 동아시아의 자주적 발전의 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과 제도의 투명성, 시민사회와 지식인 간의 대화와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특성은 탈국경적인 시민연대이며 동아시아의 균형과 지역 국가 간의 수평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성빈, 2007). 이런 차원에서 지역성, 법제도화, 정부의존성, 시민사회, 시장화와 민영화, 민관협력 등의 특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의 동아시아적 연결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재발견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정부 간 협력 이외에 비정부 간 협력, 지역성에 기반한 경제교류, 동아시아에서 다문화 가족 확대로 나타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일본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동아시아적 가치는 비록 그것의 왜곡된 역사성, 정치적 이중성,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오늘날 일본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던지는 문제 제기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상황을 탐색하고 동아시아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후 일본의 경제적 발전의 정체와 사회적 균열은 새로운 경제 활동과 공동체에 대한 바람으로 사회적 경제를 탄생시켰다.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주요 특징은 시민사회의 등장, 서비스 민영화, 실업과 일자리, 지역사회, 제3섹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을 고찰하는 이유는 그 발전경로가 한국이나 대만과 다르게 공동체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박준식·안동규, 2014). 일본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현실을 살펴 보면서 주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및 이론적 함의로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는 일본형 사회적 경제의 맥락과 관점을 내포한다(Imamura, 2013). 일본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한 법적·제도적·이론적 개념의 정의나 형태가 모호하지만 연대와 네트워크의 의미를 포함한다(네모토, 2014b). 사회적 경제 활동의 주요 특징은 지역사회 교류, 주민의 관계 형성, 새로운 자원의 개발, 민관협력, 공동의 지역 문제 해결 등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와 제도화의 함의로서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 이해된다. 다만 조직, 의사결정, 지분, 판매와 유통, 이윤과 사회공헌 등 기존 경제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특히 이런 공동체성, 연대성, 자생성, 상향성, 지역성 등의 성격을 포함한다(김혜민, 2011). 일본과 다르게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정부 주도하에 자생과 의존의 긴장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한국식 사회적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본질적으로 오랜 동안 축적된 조직적·인적 역량이나 사회의 공동체적 신뢰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정책적·물질적 지원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정부의존성 심화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진행된 성과임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조직과의 경쟁에 영향을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자생적 생존 역량, 경쟁 능력, 경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소수지만 자생력이 강한 동아시아 기업들의 경험에서 생존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한국의 경우 일본형 사회적 경제의 한계(법적·제도적·이론적 개념의 모호성,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합력 취약성, 서비스 민영화, 법과 제도의 부재, 소규모성,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활용 등)와 성과(시민사회 성숙과 시민운동, 자생적 생존 역량, 개방성, 지역성, 자율성, 신사회적 경제 민관 파트너십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⁶

셋째, 동아시아적 함의로서 일본의 경험은 사회적 경제의 발생 배경을 볼 때 동아시아 전반에 사회적 및 경제적 공동체의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반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의 발생은 공통적으로 국가중심적 제도화, 시민사회의 출현, 1990년대 경제 위기 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Defourny and Kim, 2011). 일본도 비슷하게 전후 사회적·경제적 위기는 지역주민의 자주적 경제 활동의 역량을 강화시켜 사회적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주도했다.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로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넘어서 동아시아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일본의 역사와 경험은 그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의 경제 위기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로 확장하여 한국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투고일: 2016년 12월 15일 | 심사일: 2017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25일

참고문헌

강내영. 2011. “사회적 경제 사례 연구: 일본과 성미산 마을 사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4회 워크숍, 충북발전연구원.

⁶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은 정책적 지원 정비의 발달이 느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민간 현장에서 운동의 경험과 실적은 큰 성과가 있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 지원보다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인 반면에 일본은 이미 강한 지역의 힘을 제대로 법적·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걸, 2014).

- 강병노. 2008. 『사회복지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 나눔의 집.
- 강병노. 2010. “성남시 마을 만들기 사업 타당성 연구.” 경기복지포럼.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 강병노. 2014. 『서울마을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적 설립 방안 및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연구』.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강병노·유영림. 2015. “복지마을 만들기의 경험과 의미: 질적탐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 197-228.
- 고성빈. 2007. “중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국제지역연구』 16(3), 31-67.
- 김용민·제점숙·이원범. 2012.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35, 325-340.
- 김영주·박남희.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33-146.
-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 2015.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진인진.
- 김은숙. 2004. “일본의 복지마을 만들기 동향.” 『강원포럼』. 강원발전연구원.
- 김인호. 2006.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마을만들기’』. 신구대학 세미나 자료집.
- 김정원. 2003.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과 한국의 자활사업 비교 보고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김종걸. 2014.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일본학보』 100, 181-197.
- 김학실. 2011.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129-154.
- 김형미. 2011.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전국조직으로서의 사업·운동기능의 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 29(2), 77-98.
- 김혜민. 2011.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네모토 마사쓰구. 2011. “일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NPO법인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1(1), 131-162.
- 네모토 마사쓰구. 2013.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 정(神山町)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5(1), 51-64.
- 네모토 마사쓰구. 2014a. “재난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온라인 기부 시스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119-128.

- 네모토 마사쓰구. 2014b.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연구』 18(1), 57-73.
- 네모토 마사쓰구. 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 개정과 스기나미 구(杉並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 논집』 11(2), 49-69.
- 노희진 · 김인선. 2013.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 한일 양국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 『경영사학』 66, 147-177.
-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1), 61-110.
- 박준식 · 안동규. 2014.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로 비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5(2), 33-57.
- 박혁서. 2015. “일본의 지역관리제도와 민간조직의 지역관리활동에 관한 연구: TMO제도와 오사카 에어어매니지먼트제도의 비교분석(A).”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3(4), 359-377.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2013, 2014. 국제사회적경제포럼 프로그램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도시와 빈곤』 89, 5-45.
- 신필균. 2008. “커뮤니티 임팩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10주년 기념 릴레이 토론회, 지역사회변화, 커뮤니티 임팩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9-75.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3.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동 소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이남주. 2005.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개방 전략: FTA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4, 45-72.
- 이상민. 2012. “동아시아 CSR의 사회적 구성: 글로벌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41-176.
- 이상엽 · 정건섭.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방향 연구: 일본 제도와의 비교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221-252.
- 이상직 · 연준한 · 미우라 히로키. 2015.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 지형: 포괄적 제도 분석과 전망.” 『한국정치연구』 24(2), 389-419.
- 이상현 외. 2012. 『경기도 복지마을 만들기 연구』. 경기복지재단.

- 이영환 외. 2009. 『일본 간사이지역의 사회적기업: 오사카부와 효고현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 이인재 · 이문국 · 김정원 · 강병노. 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정범선. 2015. “일본의 상권 활성화사업(TMO)과 그 시사점.” 『도시미래신문』.
- 정석. 2014. “서울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과정과 시사점.” 2014년 대한지리학회 학술발표자료.
- 정재욱. 2010.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과 함의.” 『지역발전연구』 9(2), 201-234.
- 조상미 · 김진숙. 2014.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2), 287-31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 『한일 사회적 기업과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사회적 기업 정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행정자치부. 2016. 『마을기업 운영현황』. 행정자치부.
- 坪郷 實. 2011. “新しい公共と 市民社會の強化の課題.” 『新しい公共と 市民活動・労働運動』. 明石書店.
- 内閣府. 2001. 「市民活動団体等基本調査」要旨. <http://www.caa.go.jp/seikatsu/2001/0409shiminkatsudou/main.html>(검색일: 2017. 1. 23).
- 内閣府. 2017a. “内閣府 NPO.” <https://www.npo-homepage.go.jp/>(검색일: 2017. 1. 23).
- 内閣府. 2017b. “公益法人/ Public Interest Commission”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http://www.cao.go.jp/index-e.html> (검색일: 2017. 1. 23).
- Alvar, Hugosson. 2001.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fin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n Sweden and Japan.” *The Nonprofit Review* 1(2), 119-132.
- Defourny, J. and S. Y. Kim. 2011. “Emerging Models of Social Enterprise in Eastern Asia: A Cross-country Analysis.” *Social Enterprise Journal* 7(1), 86-111.
- Defourny, Jacques. 2004. “Social Enterprise in An Enlarged Europe: Concept and Realities.” http://www.ces.ulg.ac.be/uploads/Defourny_J_2004_Social_enterprise_in_a_enlarged_Europe__concepts_and_realities.pdf (검색일: 2016. 12. 1).
- Imamura, Hajime. 2009. “Social Capital Formation for Supplying Local Community

- Services through Coordination of Social Economy, Local Governments and For-profit Enterprises in Japan.” 『經濟論集』 35(1), 173-188.
- Imamura, Hajime. 2013. “Social Economy and Public Policy in Japan: Unique Relational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e in Social Service Provision.” 4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University of Liege. Belgium. July 1-4.
- Ishizuka, Hideo. 2002. “The Social Economy Sector in Japan.”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73(2), 241-267.
- Lamberte, Mario and Maria Chelo V. Manlagñit. 2009. “The Impact of Women Members and Employees on the Severity of Agency Conflicts in Philippine Cooperative Credit Union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9, 183-214.
- Laville, Jean-Louis. 2003. “A New European Socioeconomic Perspective.” *Review of Social Economy*, LXI 30, 389-405.
- Lazerson, M. H. 1988. “Organizational Growth of Small Firms: An Outcome of Markets and Hierarch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3), 330-342.
- Monzon, Jose Luis and Rafael Chaves. 2012.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Rubin, Allen and Earl Babbie. 2001.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elmont, CA: Wadsworth.
- Singleton, Jr. Royse A. and Bruce C. Straits. 1999. *Social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il, O. Marie. 1996. “Community Building: Building Community Practice.” *Social Work* 41(5), 481-499.

Abstract

Where is the Social Economy for Community of Japan Going in East Asia?: The Challenges of Japan

Byegong-Ro, Kang Seoul Hanyoung University

There has been a consistently growing interest in the Japanese model among Korean scholars as one of the sustainable approaches for social economy in East A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social economy for the communities in Japan.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e Japanese way of a social economy is developing on the diverse sectors such as the non-profit s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classical provider have been urged in market place to develop a new role of a social economy. Becaus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has been complicated by diverse sectors, it may be the diffusion of the concept that has led to the difference from Japan.

Ground on this concept, it is most likely that such notions may be different to Korea and Europe including concepts such as social business (ソーシャル・ビジネス) and community business that are easily identified in Japan. According to the case study, it includes the attributes of concepts of self-perpetuating, community, atypical system, bottom-up in the Japan society. Based on analytical results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model include civil society, bottom-up activity by the citizenry, and Japanese-style community-oriented approaches in East Asia.

Keywords | Social economy, Japan, East Asia, community, social welfare

